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공일자 | 2013. 8. 14          | 담당자 | 기승도 수석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|
| 홍보담당 | 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 | 연락처 | 02-3775-9042, 010-7223-5795 총2매 |

## 제목 : 자동차보험 운영체계, 의무담보와 자율담보로 이원화 필요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『자동차보험의 과거, 현재 그리고 미래』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계간 보험동향 2013년 여름호 테마진단).
- 現 자동차보험에서는 과거의 제도개선 내용들이 상호 모순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.
  -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, 198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(의무보험)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.
    - 특히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(소유자)에게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에 가입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‘자동차보험은 사회보험’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 제도임.
    -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여론 및 정책당국은 자동차보험료 효율조정에 영향을 주어 왔음.
  - 1983년 자동차보험취급사 다원화를 거쳐, 1994년 이후 자동차보험 효율자유화의 흐름은 자동차보험 효율조정 및 상품개발시 보험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것임.
    - 1990년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개방화된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완성됨.

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따른 국민의 자동차보험 가격통제와 가격 자유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자율성이라는 두 제도 사이의 개념 충돌, 즉 양자 간의 인식 차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와 관련한 반복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함.

□ 자동차보험제도에 내포된 모순은 현 자동차보험산업에서 ‘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’, ‘타보험종목과 자동차보험종목의 불균형’, 그리고 ‘직판전업사의 경영위기’, ‘불균형가격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감소(사고율 증가, 서비스제고 기능 약화)’와 같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.

□ 따라서 자동차보험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현 자동차보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○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의무가입담보인 대인배상Ⅰ 등은 규제담보로 하고 기타 임의담보는 자율담보로 운영대상을 이원화할 필요

○ 의무담보의 요율수준, 요율제도 및 상품내용에 대한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하고, 자율담보는 요율 및 상품개발 자유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

첨부 : 테마진단 “자동차보험의 과거, 현재 그리고 미래”. 끝.